

중국, 새로운 소비진작 정책 “검토”

상무부, 가전 보조금 폐지로 수요 급감 ... 소비둔화·경기하강 방지

중국이 소비진작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상무부는 “새로운 소비촉진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자국의 소비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2월17일 발표했다.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 후 내수활성화를 위해 중고 가전을 폐기하고 새 제품으로 구입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구환신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가전판매가 급증했으나 2011년 말 정책 시행이 종료됐다.

이구환신 정책의 폐지로 춘절 연휴 때 베이징(Beijing), 상하이(Shanghai) 등 주요 도시에서 쑤닝(蘇寧), 귀메이(國美) 등 대형 가전 유통기업들의 매출이 2011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무부 집계 결과에 따르면, 1월 가전 판매액이 전년동기대비 10.0%, 자동차 4.8%, 주거용품 5.2% 감소했다. 반면, 귀금속은 32.1%, 통신기자재 21.3%, 식품 22.2% 증가했다.

상무부는 “주요 소매제품의 판매가 둔화하거나 줄고 있지만 소비증가 추세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관계 부처들이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민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국적 가전기업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정부의 소비촉진책을 기다리느라 소비를 늦추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소비둔화와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서라도 곧 새로운 소비촉진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2/17>